

일·삶·쉼의 가치를 더하는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 지원 기본계획(안)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초저출생의 장기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경쟁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결혼·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광역시는 모두 함께 누리는 워라벨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을 일·생활균형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번 호는 인천광역시 지역특성, 일·생활균형 지수 변화 및 실태 분석에 기초한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 지원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연구」의 일부를 발췌하였다.

CONTENTS

- I. 연구배경 및 목적
- II. 인천광역시 지역특성
- III.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 지원 기본계획(안)



IFWF Brief 구독 신청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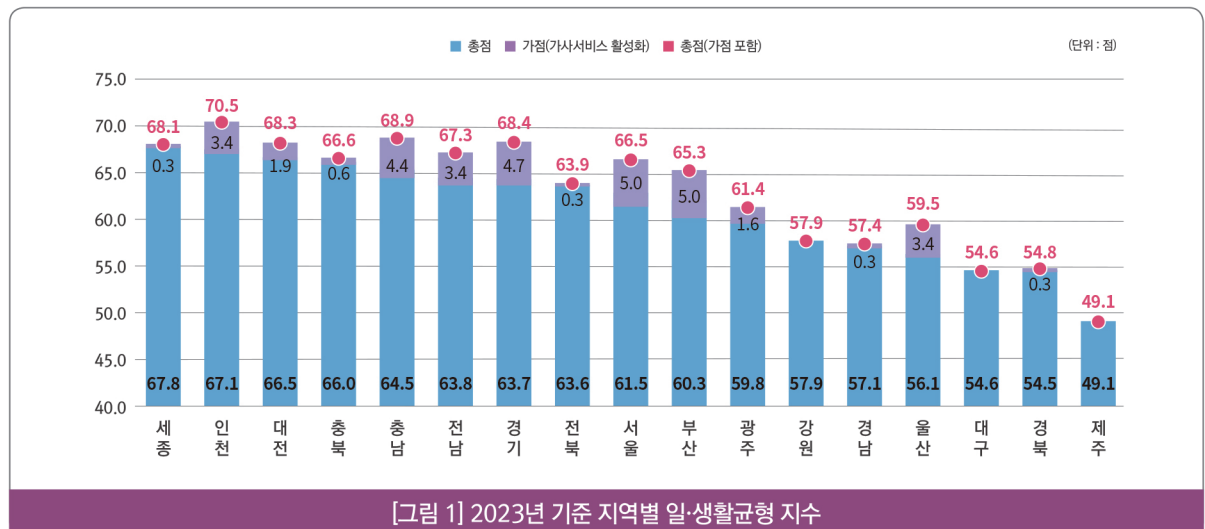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에 저출생 반전을 알리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2025년 2월 25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24년에 23만 8천 3백 명으로 전년대비 8천 3백 명(3.6%) 증가하였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전년대비 0.06명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는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증가하였다(통계청 보도자료, 2025.2.25.). 인천광역시의 경우 2024년 기준 출생아 수는 1만 5천 2백명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하여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합계출산율의 경우도 2024년 기준 0.76명으로 전년(0.69명) 대비 0.07명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증가폭이 높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반가운 이유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제1차에서 제4차에 이르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온 성과가 가시화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저출생 반전을 위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논의와 더불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추진하는 등 범국가적인 노력이 이어져 왔으며, 인천형 출생정책으로 대표되는 'i+ 1억 dream' 사업과 같은 과감한 지역정책이 추진되는데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인 변화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체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작년 6월 일·생활균형,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본 대책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등 일·가정양립 분야, 틈새 돌봄(시간제보육) 확대 등 교육·돌봄 분야,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등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분야 등 3대 핵심 분야 1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균형 지수’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는 67.1점을 기록해 세종시(67.8점)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2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9위에서 무려 7단계 상승한 것이다. 특히 인천은 노동자 휴가 사용 일수가 많고 유연근무제 도입·이용률이 높아 ‘일’ 영역에서 2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일·생활균형 관련 신규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자체 관심도 부문에서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다. 정부가 새로 도입한 가사서비스 활성화 실적 가점(최대 5점)을 포함하면 인천은 70.5점으로 국내 1위에 해당한다.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12.25.), 「일·생활균형 지수가 높은 지역? 세종, 인천,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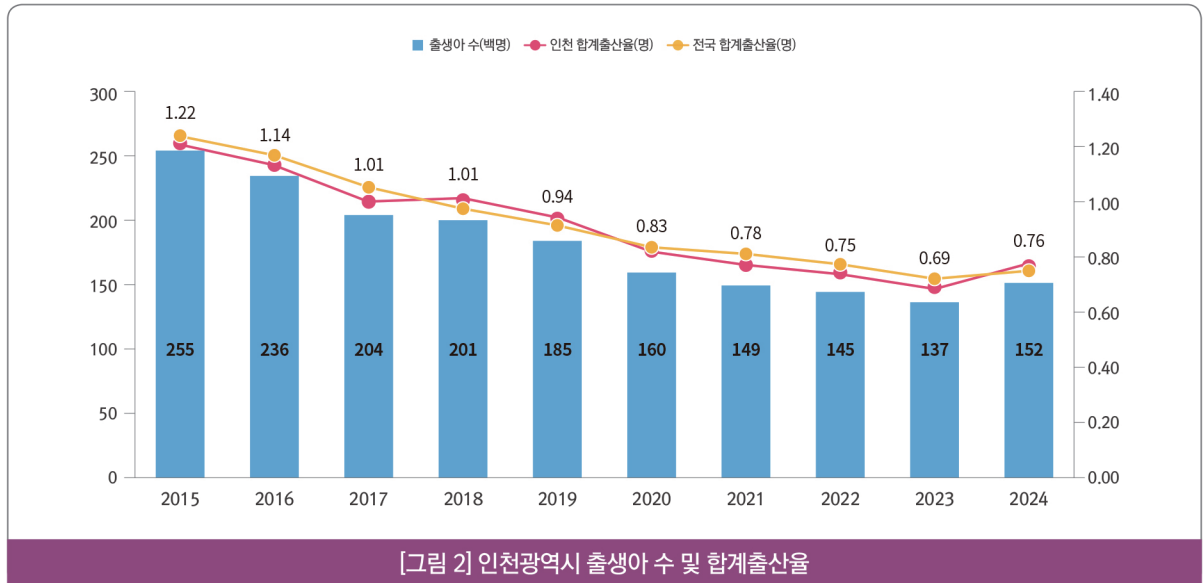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일·생활균형에 대한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생 대응을 비롯하여 고용평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등 일·생활균형 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인천광역시는 저출생 반전과 일·생활균형 지수 상위수준에 위치함에 따라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아오지 못한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에 대한 추진 의지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 지역특성 및 일·생활균형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일·생활균형 지수 변화, 일·생활균형 실태 및 정책수요 분석에 기초하여 2026년부터 향후 5개년에 걸친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III 인천광역시 지역특성

1 지역특성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인천광역시의 출생아 수는 2024년 기준 15만 2천 명으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추이 변화는 전국적인 양상과도 일치한다. 특히 2023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인천이 11.5%로, 전국 평균 증가율(3.6%)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2024년 기준 0.76명으로, 전국 평균(0.75명)보다 소폭 더 높다. 지난 10년간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 0.05 명 범위)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추세와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이어오다 2023년 0.69명에서 2024년 0.76명으로 반등하였다.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가족 및 가구

2023년 기준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비율이 55.6%로 가장 많았고, ‘1인 가구’는 31.8%로 그 다음 순을 이었다. ‘기타 가구’의 비율은 10.5%를 차지한 반면, ‘부부와 양(편)친’, ‘부부, 양(편)친과 자녀’로 구성된 직계가족의 비율은 2.1%로 가장 낮았다. 한편, 핵가족의 경우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29.0%,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16.3%, ‘한부모와 미혼자녀’ 가구는 10.3%의 순으로 많았다. 인천광역시 가족형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1인 가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2015년 대비 8.5%p), ‘부부’만 생활하는 핵가족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2015년 대비 -6.9%p)과 직계가족 형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양상은 전국과도 유사하다.

〈표 1〉 가족형태별 가구 분포

(단위 : 천가구, %)

구분		일반 가구	핵가족			직계가족		1인 가구	기타 가구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한부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편)친	부부 양(편)친과 자녀		
인 천	2015	1,045	14.1	35.9	12.2	0.7	3.1	23.3	10.8
	2020	1,147	15.3	32.0	11.1	0.5	2.1	28.3	10.7
	2023	1,242	16.3	29.0	10.3	0.5	1.6	31.8	10.5
전 국	2015	19,111	15.6	32.2	10.8	0.8	3.0	27.2	10.4
	2020	20,927	16.8	29.1	9.7	0.6	2.0	31.7	10.0
	2023	22,073	17.2	26.2	9.1	0.5	1.5	35.5	9.9

주 : 1. 일반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친족가구, 5인 이하 비친족가구, 1인가구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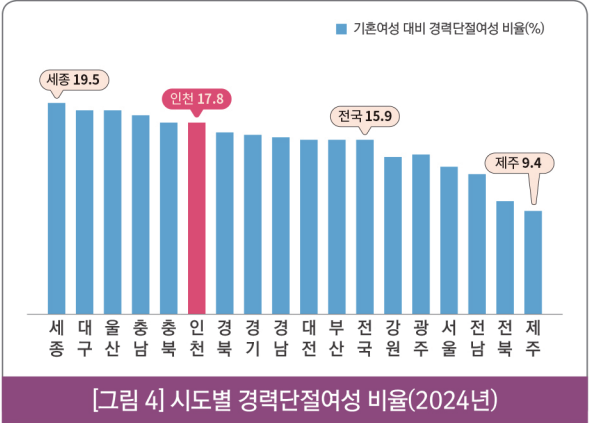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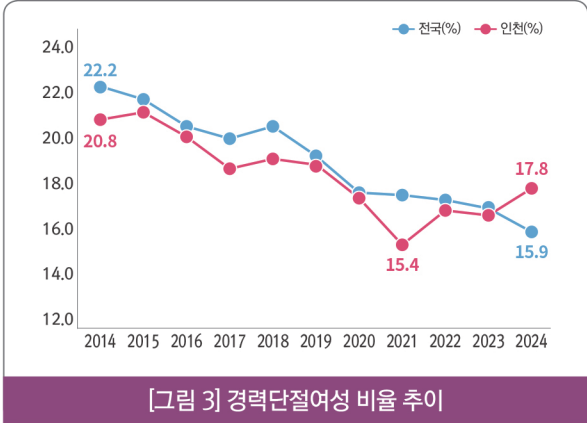
2. 가족형태별 분류 기준은 ① 부부(1세대가구-부부가구), ② 부부와 미혼자녀(2세대가구 - 부부+미혼자녀가구), ③ 한부모와 미혼자녀(2세대가구 - 부+미혼자녀가구, 2세대가구 - 모+미혼자녀가구), ④ 부부와 양(편)친(2세대가구 - 부부+양친가구, 2세대가구 - 부부+한부모가구), ⑤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3세대가구 - 부부+미혼자녀+양친가구, 3세대가구 - 부부+미혼자녀+부친가구, 3세대가구 - 부부+미혼자녀+모친가구), ⑥ 1인 가구, ⑦ 그 외는 기타가구로 분류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경력단절여성

인천의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2024년 기준 8만 1천 명이고 15~54세 비취업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49.7%로 절반에 가깝다.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기혼 여성인구 2명 중 1명은 결혼·임신 및 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인천의 경력단절여성 규모와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나 코로나

19가 발병한 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비율 추이를 보면, 인천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 오다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역전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전국과 인천 지역 모두 상승하였는데 인천은 그 상승세가 더 컸으며 충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팬데믹이 인천 노동시장에 더 큰 타격을 주었고 팬데믹 영향으로 늘어난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일)으로의 복귀를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해 보면, 인천의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2024년 현재 전국 5위로 상위에 있다.



주 : 경력단절여성 비율=경력단절여성/15~54세 비취업 기혼여성×100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 분포

인천은 5명 미만 규모의 사업체가 86.40%로 가장 많고 해당 사업체에 전체 종사자의 31.0%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명 미만 사업체는 99.94%로 종사자의 85.8%가 분포하는 반면, 300명 이상 사업체는 0.06%로 종사자의 14.2%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10~49명의 소규모이거나 500명 이상의 대규모에서 사업체와 종사자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반면, 100~299명 규모의 사업체는 감소하고 있다.

〈표 3〉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 분포

(단위 : %)

구분	인 천				전 국			
	사업체 구성비	증감률	종사자 구성비	증감률	사업체 구성비	증감률	종사자 구성비	증감률
전 체	100.00	1.7	100.0	1.4	100.00	1.2	100.0	0.8
1~4명	86.40	1.8	31.0	0.4	86.38	1.1	30.3	0.0
5~9명	7.81	0.7	12.7	0.2	7.78	0.7	12.1	0.4
10~19명	3.27	3.4	11.0	3.2	3.21	2.7	10.4	2.6
20~49명	1.71	2.2	13.0	2.5	1.76	2.4	12.9	2.6
50~99명	0.52	0.6	9.0	0.0	0.54	0.7	9.1	0.6
100~299명	0.22	-0.7	9.1	0.1	0.25	-0.3	9.8	-0.2
300~499명	0.03	0.2	2.5	0.9	0.04	0.1	3.4	0.1
500~999명	0.02	4.7	3.5	5.5	0.02	1.7	3.9	1.9
1,000명 이상	0.01	1.4	8.2	5.0	0.01	0.8	8.1	1.6
*300명 미만	99.94	-	85.8	-	99.93	-	84.6	-
*300명 이상	0.06	-	14.2	-	0.07	-	15.4	-

주 : 증감률은 '20~'23년 사업체 수,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감률을 의미
 자료 : 통계청(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 지원 기본계획(안)

1 계획수립 배경

◎ 저출생 반전을 위한 일·생활균형 지원 확대 요구

-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지난 반세기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락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및 결혼·출산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점 지원하고자 함. 이어 2025년 1월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는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목표 달성계획을 점검하고, 추가로 일·생활균형 관련 5개 과제 제시
- 2024년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대비 9.8%의 증감률을 보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이는 ‘i+ 1억 dream’ 사업을 포함한 “인천형 출생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긍정적인 신호임. 그러나 임신·출산 지원, 아동수당 확대, 청년 주거 지원 등으로 구성된 “인천형 출생정책”이 출생율 반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생활균형 지원정책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 지수 상위등급 유지

- 최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생 심화로 인한 인구문제 해결의 주요 의제로 일·생활균형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2017년 일·생활균형 지표를 개발하고, 각 지표별 통계값을 바탕으로 지역별 일·생활균형 지수를 발표해옴. 2024년에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추진실적 등을 가점으로 반영, 지역별 일·생활균형 수준을 진단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전국적으로 일·생활균형 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지수 순위는 2019년 10위 → 2020년과 2021년 13위 → 2022년 9위 → 2023년 2위(가점 포함 1위)에 위치함. 일·생활균형 지수 급상승 요인으로는 ‘제도 영역’에서 관련 조례 제정, 전담부서 설치와 가족친화인증 교육 및 컨설팅 실적 확대 등임. 인천광역시는 일·생활균형 지수 상위권 유지를 위해 일 영역 등 총 5개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지표 개선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

◎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생활균형 지원정책 마련

- 우리나라의 일·생활균형 관련 법령과 지원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협의·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인천광역시는 그동안 분절적으로 시행되어온 일·생활균형 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층적 협력체계를 구축, 향후 관련 정책의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는 2008년 가족친화인증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일·생활균형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옴. ‘2023년 지역별 일·생활균형 지수’에서 인천광역시가 전국 2위(가점 포함 1위)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내면서 일·생활균형 문화 조성에 대한 추진의지가 강화됨.
- 저출생 반전을 위해 일·생활균형 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연계하여, 인천광역시는 2023년 관련 조례 제정, 2024년 일·생활균형위원회 구성, 2025년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일·생활균형 지원 정책 추진체계를 갖추.
- 인구 및 가족구조, 고용 및 산업구조 등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일·생활균형 정책을 발굴·확대함으로써, 인천시민 모두가 일과 삶과 쉽이 조화로운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생 반전 및 인천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계획수립 범위

시간적 범위 : 2026년~2030년(5개년)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전역

- 내용적 범위**
- 일·생활균형 관련 법령, 계획 및 정책 현황 분석
 - 인천광역시 지역특성(인구, 가족, 고용, 산업특성) 분석
 -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 지수 변화 분석
 -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 지원 정책 현황 분석
 -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 실태 및 정책수요 분석
 - 일·생활균형 전문가 정책간담회 의견 수렴
 -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 기본계획(2026~2030)」 수립



3 계획수립 방향

◎ ‘일·가정양립’에서 ‘일·생활균형’으로의 조화로운 삶 지향

- ‘일·생활균형’에 대한 논의는 ‘일’과 ‘생활’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양자가 서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관계로 보는 ‘일·생활통합’의 개념으로 확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념을 혼용하여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일·가정양립’ 지원에서 ‘일·생활균형’으로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정책 개발에 초점

◎ 일·생활균형 제도 확산을 위한 기업과의 연계·협력체계 강화

- ‘일·생활균형’을 위한 지원은 단지 출생을 반전에 국한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모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지향함. 지역사회 내에서 일·생활균형 제도가 공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일·생활균형 제도 확산을 위해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기업과의 연계·협력 강화 필요

◎ 생애주기별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체감형 지원방안 마련

- 우리나라의 일·생활균형 정책은 전형적인 핵가족, 특히 양육기 가족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기, 임신·출산기, 중년기 등 생애주기별 정책수요자의 일·생활균형을 지원할 수 있어야. 정책수요자들의 여건이 매우 다양한 만큼, 이들의 여건에 따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

◎ ‘현금 지원’에서 ‘시간 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최근 출산·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4.5일제 도입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금 지원’ 방식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도모하는 ‘시간 지원’ 정책으로 점진적 전환 요구

◎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일·생활균형 사각지대 해소

-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일·생활균형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음. 특히, 혼자서 가사와 양육을 부담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은 보편적인 핵가족과 비교해 볼 때 일·생활균형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요구되므로, 일·생활균형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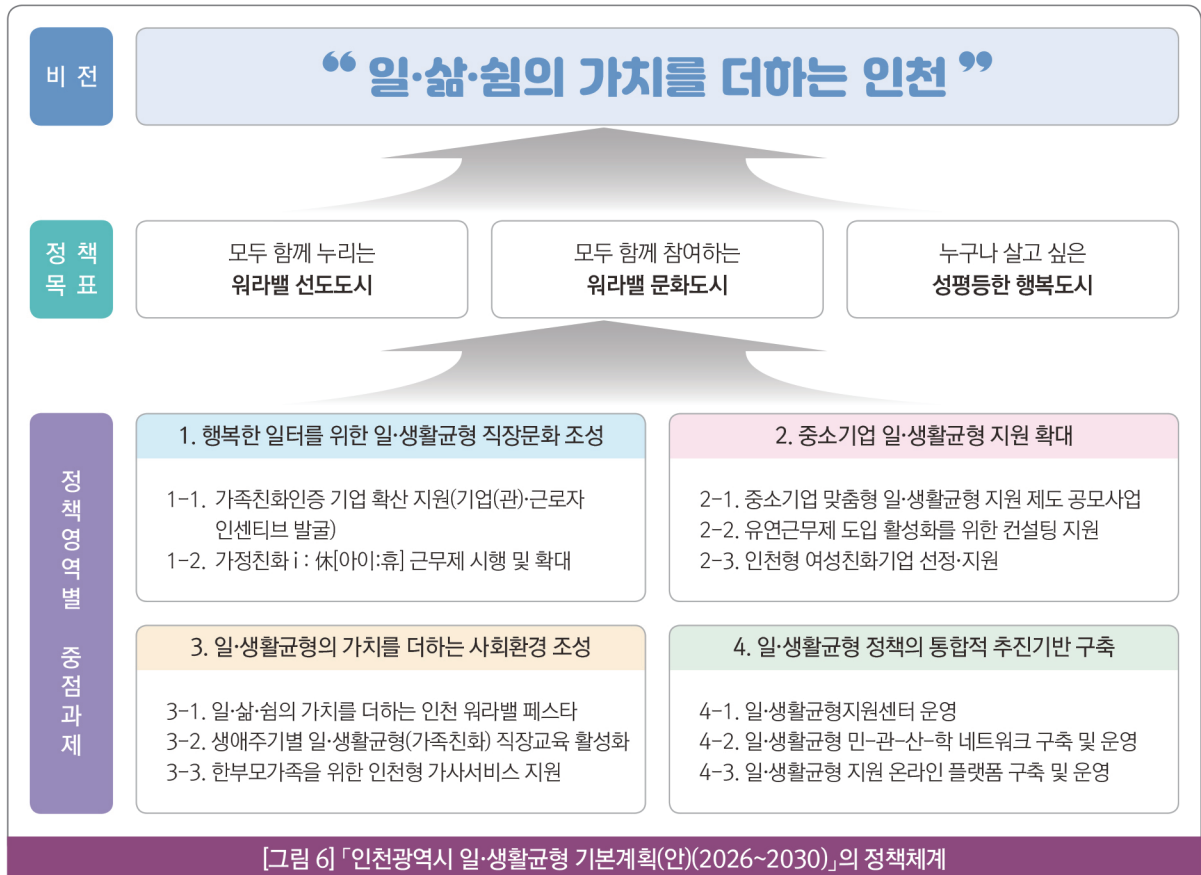
추진단계	추진내용	추진방법
연구설계	- 연구수행계획 수립 -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방법 등 연구설계	연구자료 조사 착수심의
문헌고찰	- 우리나라 일·생활균형 법령 및 계획 분석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일·생활균형 정책 현황 분석 - 일·생활균형 관련 선행연구 고찰	문헌연구
지역특성 및 현황 파악	- 인천광역시 지역특성 분석: 인구·가족구조, 고용 및 노동시장, 산업구조 -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 지수 변화 및 지원정책 분석	통계·행정자료 분석
실태 및 정책수요 파악	-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 실태 분석 - 분석자료: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원자료 중 인천지역 데이터 분석 - 분석기간: 2019년 ~ 2023년(5개년) -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 정책수요 조사·분석	2차 자료 및 수요조사 분석
과제 도출	- 일·생활균형 분야 전문가 정책간담회(총 2회) 의견 수렴 - 기본계획 수립 방향 검토, 추진과제 도출 및 논의	정책간담회
기본계획(안) 도출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 기본계획(안) 도출	자문회의
의견 수렴	추진과제별 사업계획 소관부서 의견 수렴	회의
심의·발간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 기본계획(2026~2030)」 수립	최종심의 보고서 발간

[그림 5] 계획 수립 추진 절차

4 기본계획의 구조

-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 기본계획(안)」의 비전은 “일·삶·쉼의 가치를 더하는 인천”으로 설정함. 이는 인천광역시가 모든 시민을 일·생활균형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으로 보고, 모든 시민의 일·삶·쉼의 가치를 존중하고 누구나 일·삶·쉼이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 “일·삶·쉼의 가치를 더하는 인천”이라는 비전 하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목표를 제시. 즉, ‘모두 함께 누리는 워라벨 선도도시’, ‘모두 함께 참여하는 워라벨 문화도시’,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성평등한 행복도시’임. 이러한 정책목표는 일·생활균형 지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고, 함께 참여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성평등한 행복도시를 실현한다는 맥락에서 민선8기 시정 비전인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동일한 지향점을 가짐.

- 이번 기본계획은 일·생활균형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에서 ‘일·생활균형’으로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고, 일·생활균형 제도 확산을 위해 기업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일·생활균형 지원 정책 마련 시 ‘현금 지원’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일·생활균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음.
- 이러한 방향성에 기초하여 본 기본계획의 정책영역은 ① 행복한 일터를 위한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 ② 중소기업 일·생활균형 지원 확대, ③ 일·생활균형의 가치를 더하는 사회환경 조성, 그리고 ④ 일·생활균형 정책의 통합적 추진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함. 마지막으로 이러한 4대 정책영역에 대해 총 11개 추진과제를 제시



IFWF 정책브리프



- IFWF Brief(No.83)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이행점검(2023~2024)
- IFWF Brief(No.82) 인천시 발달지연 영유아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IFWF Brief(No.81) 인천 학교 밖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전략
- IFWF Brief(No.80) 인천 고려인 주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참여와 성장
- IFWF Brief(No.79) 인천시 아이사랑꿈터 운영 현황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책브리프를 찾아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인천여성가족재단 채널 추가하세요. ➕

인천여성가족재단
Incheon Foundation For Women & Family

21338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 Tel 032) 511-3141 Fax 032) 518-3828
www.ifwf.or.kr COPYRIGHT(C) INCHEON FOUNDATION FOR WOMEN&FAMILY ALL RIGHT RESERVED

